

Online Series

2017. 02.15. | CO 17-05

트럼프 시대 미일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이기태(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2017년 1월 20일 취임연설에서 명확하게 표명한 것은 고립주의 정책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였다. 그리고 트럼프는 취임 직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미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TPP 탈퇴를 예고했고 주일미군 주둔비용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일관계의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핵심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의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한일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시대 미일관계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이것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트럼프 시대 미일관계: 일본 때리기?

2016년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아베(安倍晋三) 총리가 히로시마와 진주만을 상호 방문하면서 굳건한 관계를 과시했던 미일관계가 트럼프의 등장으로 새로운 관계 재정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정권 출범 이후 아베 총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개정, 평화안전법제 통과 등 미일안보협력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하였고, 아베 총리도

12월에 진주만을 방문하면서 오바마-아베의 미일관계는 안보 측면에서의 미일동맹 강화와 함께 과거 역사 화해를 통한 향후 미일관계의 긍정적 관계 발전을 예고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미일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 제기 등을 통해 일본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당시에 이는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 및 미일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후 트럼프의 일본 핵보유와 같은 발언 철회 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일본 내에 존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요미우리 신문에서 실시한 일본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미일관계에 대해 ‘불안감이 크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였다. 또한 일본경제에 ‘악영향이 크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70%였는데 이 두 문항 모두 대통령선거 직후인 2016년 11월 12~13일에 실시한 조사에 비해 모두 12% 상승한 수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 미일관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먼저 취임연설을 통해 통상정책의 대전환을 꺼내들었다. 즉, 취임 직후 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의 자동차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1월 23일)라고 비판하면서 미일 간 자동차 무역 문제를 제기하였고, ‘엔저’ 정책으로 대표되는 아베 정부의 통화정책을 지적하는 등 연이은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아베 정부의 엔저 유도를 통한 아베노믹스 성과가 역으로 미국에게는 무역 적자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1월 20일의 시정방침연설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TPP 조기 발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향후 미일 간 마찰을 피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계속 설득해 나간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는 아베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인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TPP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아베 총리의 집념이 강하게 들어 있다. 트럼프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아베 총리는 2월 10일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중시하는 인프라 투자 등으로 미국 내 4,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 및 70만명 고용 창출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TPP에서 이탈한 점에 유의한다’라는 표현이 명기되면서 향후 다자간 무역 협상이 아닌 미일 양자간 무역 협정에 집중하면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트럼프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파악된다.

한편,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 동맹국에게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대일무역과 미일안보를 관련시키면서 미군주둔경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였고 만일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주일미군 철수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이 어느 한 쪽만 이익을 향유하는 구조가 아니며, 미군 주둔경비에 대해서도 미일 간에 적절한 분담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에게 ‘미일동맹’의 의의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축’이며 트럼프 행정부와도 미일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미일의 유대감(키즈나, 絆)’을 한층 강화해나가고 싶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일본은 트럼프의 등장을 외교안보정책에서 냉전 종식 이후 커다란 전기(轉機)로 인식하고 있다. 즉 60년 이상 지속된 주일미군으로 대표되는 미일동맹의 근간에 변화가 초래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다.

미일관계의 강화는 무엇보다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바탕으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로 진출하려는 것을 저지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임을 재확인하면서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아베 정부가 그 동안 실질적인 미일동맹의 상징을 ‘센카쿠 열도(중국어명: 다오위다오)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적용대상’ 표명으로 요청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센카쿠 문제에 개입시키면서 긴밀한 미일동맹 관계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또한 매티스(James Mattis) 미국방장관은 2월 3일 일본 방문시 주일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일본의 방위 분담은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트럼프와 매티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일정 정도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라고 밝히며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게다가 정상회담 다음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라고 밝히며 아베의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일본의 안보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대북 위협 대응을 위한 미일동맹의 중요성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에 압력을 가하면서도 안보적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미일동맹 강화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아베 정부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명목으로 대외적으로 미일동맹 강화와 독자적 방위력 증강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협력하려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동아시아 상황 인식이 존재한다.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아베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불안정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등장에 따라 미일안보체제까지 ‘변수’로 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향후 아베 정부는 독자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하면서도 아시아의 안정이 가져올 미국의 이익이 ‘미국 우선주의’와 넓은 의미에서 모순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트럼프를 설득하려 할 것이다. 즉, 미일동맹의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꾀하는 것이 아베 외교에 주어진 과제이다.

미일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트럼프 등장에 따른 미일관계의 향방은 향후 한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중일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안보면에서 계속적으로 미일이 중국에 대응하는 태세가 계속될 때 한국은 여러 경제 및 안보적 현안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일관계의 전망은 한반도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서 미중일 3국의 전략관계 추이를 항시 주목해야 한다. 현재 미일관계는 경제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존재하면서도 안보적으로 기존의 협력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미일협력을 통해 아베노믹스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성과와 중국의 군사적 공세에 대응하려는 아베 정부는 결국 미국에 협조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vs 미일의 대결 구도 심화로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타의에 의해 선택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히 한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둘째, 대북 문제에서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라는 공통의 위협을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응분의 부담’ 요구에 따른 미일동맹 강화를 대북 안보 측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가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되거나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 안보 협력은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일본의 역할 확대가 중일 간 갈등을 고조시켜 한반도 통일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은 대북 역지력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미국과의 역할분담에 대해 한일 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미국의 TPP 탈퇴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비록 미국이 TPP 탈퇴를 결정했지만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 미국을 계속해서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와 같은 다자간 무역 협상이 갖는 장점이 존재하고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협상, 예를 들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한일 정상은 트럼프를 설득하거나 한중일 FTA 체결과 같은 다자경제협력 방안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KINU 2017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